

6 '청년은 지금' 특별기획 - ⑤ 청년 일자리 문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가 수가 급감하며, 청년층의 고용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사진=한진석 기자)

청년 대상 일자리 다양성과 폭 모두 감소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는 급격히 하락했고, 산업생산 중 전년 동월 대비 충격은 문화여가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으며, 제조업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의 고용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여가업이나 보건업 분야에서 원하지 않는 고용 변화, 즉 비자발적 이직이 증가하였다. 자발적 이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생산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감소 추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비자발적 이직은 증가 후 감소 패턴이 나타났다지만, 문화여가업 및 보건업의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는 급격히 하락했고, 산업생산 중 전년 동월 대비 충격은 문화여가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으며, 제조업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비자발적 이직만큼은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가 수가 급감했는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20년 2월에는 4.9만 명이 감소되었으나 6월에는 17만 명의 청년 취업자가 감소했다. 따라서, 2020년 4월 전체 고용률 감소가 1.4%p에 반해 청년 고용률 감소는 2.0%p로 두드러지고 있다. 분야별로는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80.6%)과 제조업(14.3%)에서 각각 33.3만명과 5.7만명의 고용 감소를 보여 심각한 수치를 나타냈다.

청년 대상 전체 일자리 비율 감소

19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 대상 일자리는 지속과 신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고용 자료가

2016년~2019년임을 고려해 지속 및 신규 채용 일자리를 임금과 비임금 조건에 따라 구분할 경우 청년 대상 임금-지속 일자리와 비임금-지속 일자리는 모두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속 일자리의 경우 전체 1,679만 명에서 2019년 1,794명으로 증가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 일자리는 23.3%에서 21.1%로 감소했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2016년 11.6%에서 1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 역시 감소했다. 청년 대상 임금 및 비임금 신규채용 일자리는 2016년 34.3%에서 34.9%로 다소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일자리는 27.2%에서 24.5%로 감소해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이 감소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단기적인 일자리 공급이었던 비임금 일자리의

규모 역시 전체적으로 감소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일자리 감소에 대응한 정책 운영

현 정부의 일자리 공급 특성은 단순한 양적 확장이 아닌 형평성을 고려한 일자리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공급 정책 유형은 민간기업,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상생형일자리 정책은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상호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생형일자리는 지역 노사민정 네 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통해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원하청 상생 등) 고용창출, 지역경제발전, 근로생활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공공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에 81개 유형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당 정책의 가장 큰 특성은 단순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에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구직-채용-근속 단계로 구분되어 단계별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구직 단계의 일자리 정책은 대표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 정책이 있다.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인원을 2배(5만→10만 명)로 확대하며,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 인원을 5만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하여 위촉된 신규채용에 대응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채용단계의 정책으로는 기존 20만 명에 신규 9만 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은 추경을 통해 총 1조4,270억 원이

추가적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근속단계의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신규 인원 13,2만 명에게 공공일자리 정책을 공공부문에 81개 유형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해당 정책의 가장 큰 특성은 단순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에 있다. 청년일자리 정책은 구직-채용-근속 단계로 구분되어 단계별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구직 단계의 일자리 정책은 대표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 정책이 있다.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인원을 2배(5만→10만 명)로 확대하며,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 인원을 5만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하여 위촉된 신규채용에 대응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채용단계의 정책으로는 기존 20만 명에 신규 9만 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은 추경을 통해 총 1조4,270억 원이

투자를 통해 미래 가용노동력과 성장 동력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변화되는 환경변화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산업 침체의 미화하며, 이는 비대면 및 디지털 일자리 신설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즉,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비대면 일자리를 공급해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며, 민간으로 확대된 재택근무를 통한 비대면 일자리 확산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비대면 일자리 시스템은 지식과 경험의 축적 측면에서는 대면 일자리에 비해 효율과 성과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비대면 일자리 공급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러한 비대면 일자리 공급은 단순히 단계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 공급 외에도 장기적으로 장소 및 공간에 대한 의미를 보다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하는 일자리 방식

으로 판단된다. 즉,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의 IoT, ICT, AI,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협업으로 디지털 및 업무 체험 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공유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의 약 8천억 원을 투입한 디지털일자리 정책 및 한국판뉴딜 정책과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별로 차별되는 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창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문화, 자천자원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지역별 크리에이티브를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창업 지원으로 지역의 개발과 함께 일자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을 통해 감소하는 청년 대상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변화에 대비해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여 운영해야 한다.

“ **안정적인 청년 대상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